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2026.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수립 배경	1
II. 정책여건 분석	3
III. 제품안전관리 현황	6
IV. 제5차 종합계획 평가 및 시사점	8
V. 추진 목표 및 전략	12
VI. 중점 추진과제	13
1.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13
2. 위해도 중심의 규제정비 합리화	18
3.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시장감시 강화	26
4.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 조성	32
VII. 향후 추진일정	40

1. 법적 근거 및 개요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11년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

* (1차) '11~13년, (2차) '14~16년, (3차) '17~19년, (4차) '20~22년, **(5차) '23~25년**

-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제품의 AI·융복합 확산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 참고 : 제품안전 종합계획 개요 〉

- **계획명** :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6~ 2028년 (3년마다 수립·시행)

- **법적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계획 범위**(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

①목표 및 기본방향, ②제품안전 기반조성, ③제품사고 방지대책, ④수입제품 및 신제품의 안전관리, ⑤제품안전 R&D, ⑥규제 합리화, ⑦제품안전 정보 공유, ⑧국제협력, ⑨안전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등

- **수립절차**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수립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 ③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통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제출

- **수립경과**

○ 기초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25.4월~12월)
 ○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종합계획 정책과제 수요조사 실시('25.7.16.~8.22.)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26.3.9.~3.25.)
 ○ 제품안전실무협의회('26.4.24.~4.30.) 및 정책협의회('26.5.6.~5.12.) 협의

2. 필요성

□ 글로벌 유통·제품환경 급변으로 제품안전에 새로운 도전 직면

- 글로벌 유통구조 확대와 디지털·AI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급증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의 보급 확산
- 이로 인해, 해외직구 위해제품 국내 유입, AI·융복합·신제품의 불확실성 등 예측·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위험요인이 지속 증가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제품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가치”

- 제품안전은 기술혁신·유통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
- 단 한 번의 위해사고와 위해제품 유통만으로도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산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짐

□ 사후대응 중심 관리에서 데이터기반 전주기 선제 예방 필요

- 사고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로는 해외직구, AI·신기술·융복합 제품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 통제하는 데 구조적 한계
- 위해정보 수집부터 사전규제 설계, 시장 사후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AI기술을 적극 활용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 요구

□ 민관이 함께 제품안전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 전환 필요

- 정부 주도의 단속·처분 중심 제품안전관리만으로는 관리 범위와 대응 속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명확
- 정부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소비자는 시장감시 주체로의 역할 확대 필요

 제6차 종합계획(‘26~‘28) 수립을 통해, 데이터·AI기반 제품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 필요

II

정책여건 분석

□ **[유통구조]**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글로벌 유통채널 다변화로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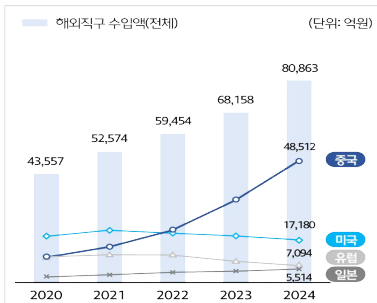
○ (해외직구) 중국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 직구 구매 증가로 국내 유통 제품 대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 유입 확산*

* '25년 해외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 5.1% 대비 높은 수준

○ (구매대행) 국내 이커머스(쿠팡, 네이버 등)와 연계한 구매대행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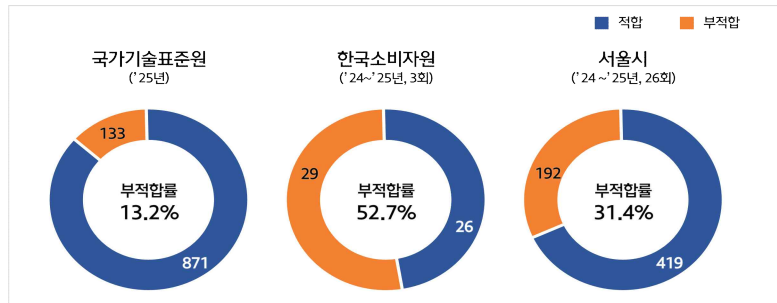
* 구매대행 제품 위반율(%) : ('22) 10.2 → ('23) 14.4 → ('25) 18.3 (국표원)

< 해외직구 수입액 추이 >



* 출처: 통계청

< 해외직구 제품의 부적합률 >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 **[제품유형]** AI, IoT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신제품의 다양화·다변화로 새로운 위해요소 지속 증가

○ (AI제품) 가전제품 중심으로 AI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고, 가정용 로봇 등 AI적용 제품군이 새로운 형태로 확대 전망

* AI·스마트가전 글로벌시장 규모는 약 400억불 수준으로 매년 약 10%이상 성장 전망

○ (융복합) 전기·생활·식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 출시되면서 현행 법령 적용이 모호한 융복합 제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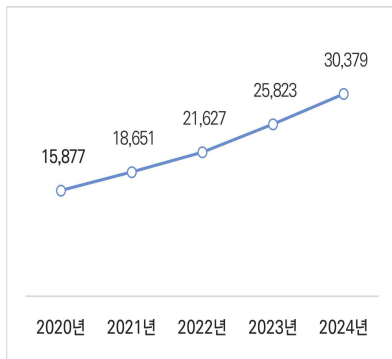
< AI·융복합·신제품 사례 >

AI 가전제품	신기술 전기용품	AI 어린이제품	융복합 어린이제품
(AI기능+전기용품)	(원격제어+전기용품)	(AI기능+어린이제품)	완구형 수저 (식품위생법+어린이제품법)

□ **[위해환경]**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소비자 제품에 대한 리콜 공표 및
위해사례가 지속 증가

- (해외) 최근 5년 OECD 회원국의 리콜 공표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완구·전기용품 등 생활밀착제품 중심으로 위해사례 다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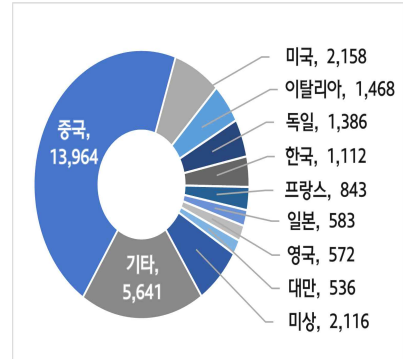
< 연도별 해외 리콜 건수 >



< '24년도 리콜 상위 품목 >



< '24년도 제조국별 리콜 >



- (국내) 제품 위해정보 접수 건수가 연간 2만여건이상 증가 추세이며,
매년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 비율도 약 5%수준으로 유지

* 제품 위해정보 접수(건) : ('22) 17,416 → ('23) 18,861 → ('24) 22,203 → ('25.9) 13,528 (소비자원)

* 리콜 조치율(리콜/조사): ('22) 5.1% → ('23) 5.3% → ('24) 5.5% → ('25) 5.1% (국표원)

□ **[관리체계]** 주요국 중심으로 정부 주도 단속·조사 위주에서 민·관
참여형 상시 시장감시체제로 전환 추세

- (관리주체)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제조·유통·
유통 전 과정의 참여자가 안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

▶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24.12월~)」** : 제조자·수입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제품안전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위해제품 판매 차단·리콜 협조 의무 부과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전략계획('23-'26)** :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의 제품안전
관리 모범사례 활용 확대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세부 이행을 위한 지침 및 교육 제공

- (관리방식)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위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제품을 선별·차단하는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EU는 Satefy Gate(기존 RAPEX) 개편('24.12)**으로 소비재 전반의 안전 체계를
디지털 기반 감시 체계로 제도화하여 유통차단 및 리콜조치 연계

▶ **미국은 수입 제품 안전인증서 전자제출(e-Filing) 의무화 제도를 도입('25~)**하여
수입 단계에서 위해제품을 사전 식별·차단하는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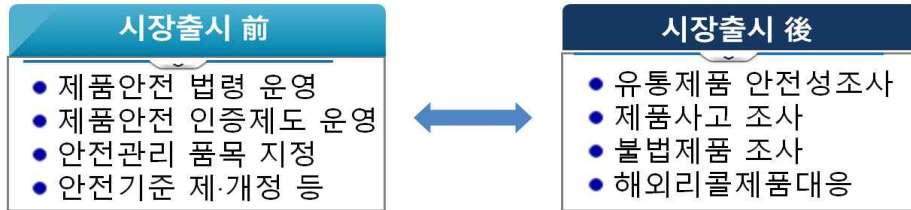
< 참고 : 주요국 제품안전정책 동향 >

온라인시장 · 해외직구	★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불법·위해제품 안전 규제 강화  불법·위해제품 사전 차단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수입 제품의 인증 정보 전자 제출 의무화 시행(CPSC, 채택 '25.01/발효 '26.07) * 온라인 직구 및 소액 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의 전자신고 의무화로 제품 타겟팅 및 검사 효율화, 고위험 제품의 추적성 확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제정·시행('24.12)으로 온라인·수입 제품 규제를 역내 제품 수준으로 강화 * 온라인 판매제품의 정보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의무 강화 등  온라인 거래 및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 관련 4개 법률」 개정('24.06) *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 등에 해외 플랫폼 사업자대상 국내 대리인 지정, 위해제품 차단 등 책임강화
융복합 · 신기술	★ 새로운 제품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해정보 분석 및 기준 개발  신기술·신제품 대응 안전기준 개발 및 잠재 위해제품 식별을 위한 조사 방법 효율화로 신속 조치(CPSC 전략계획(2023~2026)) * 신기술·신제품 위험에 대응한 안전기준 개발, 신속 위해제품 식별 및 적시 리콜 추진 등  제품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책임지침('24.11월) 및 완구·기계류 지침('25.10월)을 순차 개정하고 제품안전을 위한 책임 범위 확대 * SW, 디지털 제조 파일을 제품 범위로 확장, AI, IoT 등 디지털 제품 대응 강화 등  신기술·신제품의 안전한 시장 출시 및 적합성 평가를 원스톱 지원하는 '팀 NITE' 운영('24.05) * 신제품 공통규격 및 안전기준 제안, 사고데이터 기반 리스크평가 지원 도구 보급 등
디지털 시장감시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 시장감시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정보 시스템 개선, 기술 인프라 현대화로 제품안전 관리 역량 강화(CPSC 전략계획(2023~2026)) * IT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위해정보 식별·예방대응 역량 강화  Safety Gate(기존 RAPEX) 개편('24.12)으로 소비자 전반의 안전 체계를 디지털 기반 감시 체계로 제도화 * (기존) 위험제품 알림 중심 → (개편) 위험제품 알림+리콜+온라인 감시+기업참여 등 통합 디지털 제품안전 플랫폼  AI(인공지능) 및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활용 제품안전 조사 고도화 및 효율화 계획(NITE, '24.03) * AI 및 RPA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안전 조사 시간 단축 및 원인 규명 고도화 효율화 추진

Ⅲ 제품안전관리 현황

-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제도

* 소관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전기·생활·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해당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시장 출시 가능
- (관리품목) 사고빈도, 행정처분/리콜 등 위해도를 고려하여 규제 수준별* 안전관리대상 품목 지정 및 조정
-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순으로 규제 수준 차별화
- (관리기준) 최신 국제기준(ISO, IEC 등)으로 부합화하고, 융복합·신제품 등 제품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기준 적기 정비

< 규제수준별 안전관리 절차 및 품목 >

	안전관리수준, 절차			안전관리품목수		
				전기	생활	어린이
안전인증 (45개 품목)	제조수업 업자	신청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36	5	4
안전확인 (107개 품목)	제조수업 업자	신청 지정 시험기관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신고서류검토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64	26	17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제조수업 업자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제품시험		76	16	14
안전기준준수 (27개 품목)	제조수업 업자	자율시험 제품검사		-	27	-
안전성검사 (2개 품목)	제조수업 업자	지정 검사기관 제품검사		2	-	-
총287개 품목				178	74	35

- (시장출시 後)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 조사, 해외리콜 대응 등을 통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 시장 사후관리 대응 및 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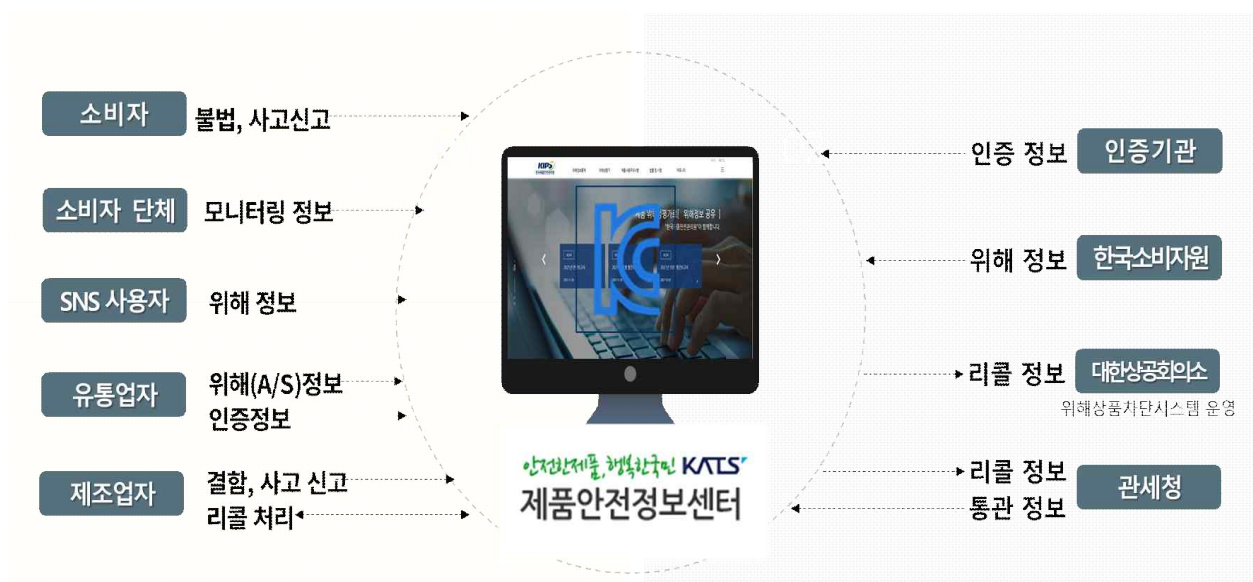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 후 안전조치 ⇒ 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제품 사고 조사	위해 사고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 조사 등을 통한 재발 및 위해확산 방지 ⇒ 리콜처분, 소비자주의보 등
불법 제품 조사	미인증·허위표시 등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인증정보 조사 등을 통해 안전조치 ⇒ 고발, 판매금지 등
해외리콜제품 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 후 안전조치 ⇒ 수입통관, 유통차단 등

- (제품안전 정보제공)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을 통해 제품 위해·리콜·인증정보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KC인증정보, 국내리콜정보, 국외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Open API로 제공

* OPEN API 1일 평균 활용 현황(건) : ('22) 312,319 → ('23) 440,975 → ('24) 404,459

< 제품안전정보포털 정보서비스 현황 >



1. 제5차 종합계획 평가

- (개요) '23.4월 수립된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①제도개선, ②사전규제, ③사후관리, ④기반조성 분야별 4개 기본 방향 제시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 주요 내용 >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사업)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과 1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

1. 제도 개선	2. 사전 규제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지원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관리	4. 기반조성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④ 온라인쇼핑몰 제품 안전관리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 (평가) 5차 종합계획에 따른 4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차질없이 수행

- (제도개선)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기업 부담 규제는 완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 역량 지원 강화

-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조정 및 적기 안전기준 정비 추진

* (품목조정)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모터달린 보드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
(기준정비) 어린이 요람, 무시동히터, 파워뱅크, 리튬이차전지 등 안전기준 정비

-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시험검사 비용 지원, 인증수수료 감면

* 영세기업 시험검사 비용 지원('23~'25, 연 6억),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24년)

- 기업이 제품 출시전 리스크평가를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 보급·지원

* '리스크평가 자가진단 플랫폼' 개발·운영('23년~), 기업 설명회 개최('23년~, 연2회)

○ (사전규제) 비관리 위해제품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수요분야 신제품의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비관리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정례회의 개최 및 관리체계 개선**
 - *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 조정 및 제품안전협의회 운영 규정 개선 등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수요제품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 전기차충전기, 누전차단기, 인덕션 등 신제품 실증특례 지원(예비 안전기준 마련 등)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 * 재사용전지 관련 법령 정비 및 안전기준 마련,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가이드 배포

○ (사후관리)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사고조사·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업무의 처리방식 개선 및 효율성 강화

- 안전성조사 결과, **중점관리품목 대상 리콜명령 조치율은 감소 추세**
 - * 리콜명령 조치율(%): ('24) 13.8% → ('25) 9.7%
- **불법신고 접수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유통 차단**
 - * 불법제품 조사 건수(건): ('23) 9,744 → ('24) 9,255 → ('25) 10,810
- **해외 주요국 리콜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위해제품 판매 차단**
 - * 해외 리콜/판매차단(건): ('23) 3,160/122 → ('24) 4,182/187 → ('25) 4,175/186
- **유통매장 위해상품 판매차단 상시 시스템 운영 확대**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매장(수): ('23) 259,523 → ('24) 265,513 → ('25) 296,669

○ (기반조성)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업 기반 강화

- 불법제품 단속을 위한 **부처, 지자체 합동 단속 등 협업체계 강화**
 - * 지자체 협력: ('23) 서울·경기 등 19개 → ('24) 인천·대구 등 21개 → ('25) 서울·부산 등 25개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불법제품 유통 여부 모니터링, 판매차단 조치**
 - * 판매차단 등 조치 건수(건): ('23) 12,985 → ('24) 9,915 → ('25) 17,366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24~26}, 문은숙) 선출 및 **주요국 양자회의**(美, 日, 中 등)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

3. 시사점

□ 해외직구, 신제품 등 제품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 C-커머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의 유입 증가

* '25년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부적합율 : 13.2% (국내 유통 제품 부적합율 5.1% 대비 위해우려 高)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확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구축,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 AI 신제품,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 확대에 따라,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로는 신종 위해요소를 적기 대응 어려움

⇒ **AI·융복합·신제품 및 비관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과학·객관적 위해도 평가를 집중 실시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 필요

□ 제품 위해도를 고려한 사전규제 합리화 전환

- 현행 안전관리대상 품목 지정 및 규제수준은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의 특성과 위해도 수준을 적기 반영하지 못해 규제 효율성 저하 우려

⇒ **위해도 수준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및 안전기준 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과학·객관적인 타당성 평가체계 도입 필요

- 배터리 등 제품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속 제기

* '25년 리콜상위 품목 : (전기용품) 전지, 플러그/콘센트 등, (어린이제품) 아동용섬유제품, 완구 등

⇒ **사고다발제품 및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속 정비 및 관리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필요

□ 빈틈없는 시장감시를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고도화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리콜 조치율은 정체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예산으로는 급증하는 유통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어려움

* 리콜명령 조치율: ('22) 5.1% → ('23) 5.3% → ('24) 5.5% → ('25) 5.1%

⇒ 사고이력, 유통량 등 위해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중점관리 품목을 선별하여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데이터기반 시장감시 효율화 필요

- 해외 리콜 정보 및 언론·커뮤니티 등 온라인 위해 정보 급증에 따라, 기존의 인력 중심 모니터링 방식만으로 신속한 대응 차질

* 해외 리콜제품(개)/국내 후속조치(건수):

('22년) 2,943/54 → ('23년) 3,160/122 → ('24년) 4,182/187 → ('25년) 4,175/186

⇒ AI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해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사고조사·리콜·유통차단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 확립 필요

□ 소비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그간 제조·수입업자 대상 사전 규제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유통 경로 다변화로 불법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데 구조적 난관 존재

⇒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비자 참여형 시장감시 활성화 등 민간 참여형 제품안전관리체계 전환 필요

- 획일적 교육·홍보 방식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제한적이며, 글로벌 유통망 확산에 따라 국내 대응만으로 위해제품 유통 대응 한계

⇒ 소비자 체감할 수 있는 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제품안전 이슈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비전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신뢰하는 촘촘한 제품안전망 구축		
기본 방향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와 AI·융복합·신제품 확산에 선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전주기 관리 체계 확립		
목표	선제대응	사고 대응 중심 →	위험예측·사고예방 중심
	규제정비	획일적 규제 →	위해도 기반 규제 합리화
	시장감시	인력중심 정기조사 →	데이터/AI 기반 상시 고도화
	기반조성	정부 주도 →	민간·소비자 참여형

4대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사고 예방 중심의
① 선제 대응체계 구축

- ▶ 해외직구 위해우려제품 조기 유통 차단
- ▶ AI·신제품 위해요인 선제적 발굴·관리
- ▶ 비관리 위해제품 안전사각지대 해소
- ▶ 사고예방중심의 리스크평가 고도화

위해도 중심의
② 규제정비 합리화

- ▶ 안전관리품목·기준 합리적 개선
- ▶ 생활밀착제품 안전기준 적기 정비
- ▶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 보호 강화
-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지원

데이터·AI 기반
③ 빈틈없는 시장감시 강화

- ▶ 통계기반 중점관리품목 집중 관리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 ▶ AI 기반 제품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 ▶ AI 활용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소비자·민간중심
④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 조성

- ▶ 민간 자율적 제품안전관리체계 확산
- ▶ 수요자중심 정보·교육·홍보 다각화
- ▶ 제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제품안전 유관기관 전문역량 제고

VI 중점 추진과제

1. 사고예방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1-1 해외직구 위해우려제품 조기 유통 차단

- ◆ 해외직구 규모 확대* 및 중국직구 플랫폼(알라테무쉬인 등) 진출 가속화 등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 국내 유입 증가**
 - * 해외직구 규모: ('22)5.3조 → ('23)6.8조 → ('24)8조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24)242조
 - ** 해외직구內 주요국 비중: (美) ('23)27.7% → ('24)21.2%, (中) ('23)48.3% → ('24)60.0%
- ◆ '25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3.2%로 국내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 5.1%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수준

□ 해외직구 위해제품 안전성조사 확대

-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수량을 지속 확대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 * ('24) 400건 → ('25) 1,000건 → ('26) 1,200건 → ('28) 2,000건 이상으로 확대
- 유통 시기(신학기, 계절용품 등),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위해 우려가 큰 품목 집중 조사

< 예: '26년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계획(안) >

구분	1차	2차	3차	합계
조사 제품	봄·나들이 용품	가을·여행 용품	겨울용품	1,200개
조사 시기	2월~4월	7월~9월	9~12월	
계	400	400	400개	

- (모니터링/차단) 위해가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페이지 삭제 요청 및 언론 공개
 -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주요국(43개)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등 통해 적발된 위해제품
-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안전정보 포털에 공개('26)하고, 소비자24시스템과 정보 실시간 연계* 추진('27~)
 - * 제품안전정보포털 고도화('27년)에 맞춰,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등 위해 정보를 소비자·기업 및 국민들에게 API 등을 통해 즉시 제공

- (이행점검) 판매차단 조치 이후에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 이행 여부 및 위해 제품 재유통 지속 모니터링 실시

* 해당 플랫폼 사업자 이행여부 점검 및 미조치시 판매차단 조치 요청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부처 협업 확대

- (법령 정비)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해외 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 관계부처 협력 등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법령 적기 정비⁽²⁶⁾^(신규)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6.6월 시행)에 따른 시행령, 운용요령 정비

주요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관리대상 사업자 범위	매출액, 소비자규모 등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규정 * 매출액 1조원 이상, 월평균 국내 소비자수 100만명 이상 등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절차·방법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수립·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요청 자료, 조사방법·절차, 결과공표 및 조치 등 절차 명시
▶ 사업자 결과보고 사항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정보 삭제 등 조치결과 보고

- (부처 협력) 범부처 해외직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해외직구 관련 법령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

* 해외위해물품 실무협의회 : 해외직구 제도개선 과제 발굴, 안전성조사/위해정보 공유 등 (공정위, 국표원, 기후부, 식약처, 관세청, 과기부, 서울시 등 9개 기관 참여 중)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내 해외통신판매중개업자 대리인 제도('27.1월 시행 예정)

1-2 AI·신제품 위해요인 선제적 발굴·관리

◆ AI기술이 적용된 제품 출시 증가, 배터리 내장제품 사고 등 新위해요소 출현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휴머노이드 물리적 위해 우려, 배터리(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발생,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입 증가

◆ 사회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제품출현 대응 및 신수요분야 융복합 제품에 대한 적기 시장 출시 지원 필요

□ AI적용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체계 확립) 「AI제품안전 혁신 TF*」 구성('26~), AI 제품의 선제적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중점 어젠더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신규}

* 분야별 전문가 분과위 운영 → 국내·외 정책동향, 실태조사, 사업과제(R&D) 기획 등

○ (단계별 대응) AI 적용제품 특성을 반영한 위해요인 발굴→ 평가→ 대응 등 쉼주기 관리체계를 통한 단계별 대응방안 도출^{신규}

< 단계별 AI 제품 안전관리 대응방안(예시) >

- ① 고위험·생활밀착형 AI 제품을 우선관리 대상으로 선정(예: 가전제품, 가사 로봇 등)
- ② 사전 안전성 검증 방안 검토 및 제품별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③ 시범사업 및 실증특례 등 사업화 지원 방안(예비 안전기준 등) 도출 → R&D사업연계
- ④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 및 안전기준 정비 등 → R&D 사업연계

□ 융복합·新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R&D사업 연계 추진

○ (안전기준 개발) AI·융복합신제품의 안전성 확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신규}

* ▼원격제어 스마트 가전 ▼융복합 제품 등 주요 품목군 가이드라인 및 안전 요구사항 도출

○ (안전성 검증) 사고다발제품(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규명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신규}

○ (기반조성) 위해제품 신속 식별 및 유통방지 방안 연구, 제품위해 정보 수집·공유 및 제품이력관리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신규}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신규 R&D) >

- ▶ (사업개요) ①제품안전기준 개발 ②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사업지원 및 ③제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는 제품안전분야 신규R&D 사업
- ▶ (사업기간/예산) 5년('26~'30) / 연 60억원(294.2억원)

1-③ 비관리 위해제품 안전사각지대 해소

- ◆ 비관리제품 중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 발굴 확대를 위해 소비자 관점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비관리 위해품목대상 안전관리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위해요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과학적·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필요

□ 소비자 수요중심의 비관리 위해품목 발굴 확대

- (모니터링 강화) 새로운 유형의 제품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자 위해 정보를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해품목 상시 발굴^(신규)

구분	AS IS		TO BE
모니터링 내용	소비자 위해사고 중심 (소비자원, 병원, 소방청 등)	→	위해사고 + 위해우려 징후도 포함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몰 리뷰 등)
제품 범위	불특정 다수품목	→	AI·융복합·신기술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방법	인력중심의 모니터링	→	AI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SNS 등 상시 모니터링

□ 비관리 위해제품 소관부처 조정 절차 확립

- (관리필요성 검토) 위해우려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위해요인별 소관법령*에 따른 과학·객관적 위해성평가, 실태조사 등 실시

* 식약처(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기후부(화학제품안전법), 산업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등

< 위해요인에 따른 소관부처 >

위해요인	대상 제품군	소관 부처
1 화학	① 섭취·투여·접촉·흡입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	식약처
	② 살생물제/물질유출 가능성이 생활화학제품	기후부
	③ 물질유출 우려가 낮은 고정완제품	산업부
2 물리	· 돌출 부위, 운동(이동, 회전), 고정 불안 등 물리적 우려 제품	산업부 등
3 전기	· 화재, 감전, 전자파 등 전기적 위해우려 제품	산업부, 과기부 등

- (소관부처 조정) 위해요인이 복합·모호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을 위한 분류 가이드를 마련하여 부처협의 및 정책협의회 활용

1-4 사고예방중심의 리스크평가 고도화

◆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제품 다변화 등에 따라 기존 리스크평가체계에 한계가 발생하여 리스크평가 방법 고도화 및 기반 강화 필요

□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평가체계 고도화

○ (평가체계 보완) 新 위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리스크평가 체계(포괄적·심층 평가*) 개선 추진

* (포괄적 평가) 소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유통량, 위해 건수 등을 통해 위험등급을 단순 평가 (심층 평가) 특정품목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위해도 선정·후속조치 추진

- (경향 분석) 高 위해도 품목군 도출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위해경향(인지도, 파급력) 분석 방법론 개발, 심층 평가 대상 선정에 활용

* ('26) 방법론 연구 → ('27~'28) 개선된 위해경향 분석을 통해 심층 평가 대상 선정

- (심층 평가) 연도별 중점 심층 리스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평가하여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 마련

* ('26)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 ('27) 신기술 제품 → ('28) 융복합 제품

< 연도별 중점 심층 리스크평가 품목 예시 >

('26) 사각지대 제품(무선온풍기)	('27) 신기술 제품(전동바운서)	('28) 융복합 제품(트라이크)
		

○ (기반 강화)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리스크평가 신속 추진 및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목별 평가체계 마련^(신규)

- (신규기법 도입) 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평가기법 설정을 위해 해외 신규 리스크평가 기법*(ISO 5665, UK PRISM 등) 도입·적용

* 기존 기법(EU RAPEX 등)은 소비자 행동 분석 기반 기법으로 신제품의 사고원인 분석 등에 적용 곤란

- (기준 개발) 국내외 제품 리스크평가 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위해 시나리오별 표준화된 물리적·화학적 위해도 평가 기준* 개발

* 사고다발제품, 위해수준 상향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 기준 마련

2. 위해도 중심의 규제정비 합리화

2-1 안전관리품목 · 기준 합리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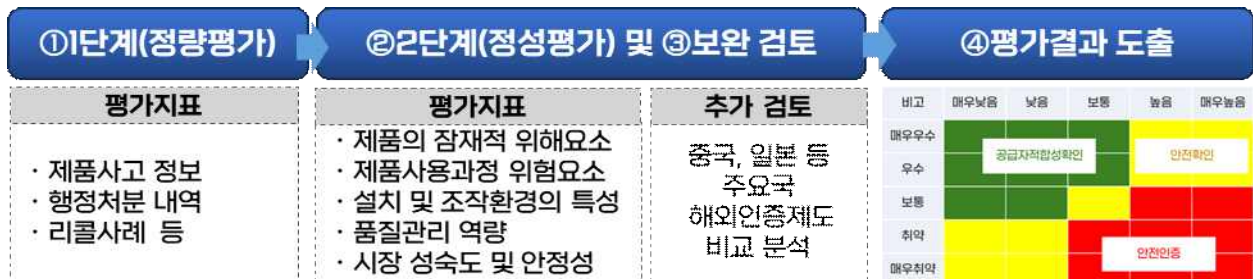
- ◆ 제조기술의 성숙도, 품질관리 수준, 시장환경 및 제품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안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 ◆ 주요 선진국(EU, 미국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중심으로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품목별 규제수준 타당성 검토를 통한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필요

□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품목 조정

- (안전관리품목)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규제실효성을 고려한 규제수준 합리적 정비^(신규)
- (기존 품목 조정)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지표”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제품**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관리품목 합리적 조정

* 위해사고, 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표 고도화('26)하고, 품목별 평가를 통해 규제수준 조정(안) 도출

<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 절차(안)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안전인증 품목 중 제품 완성도 및 제조사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 공장 심사 실효성이 낮은 품목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조정('26) · (전기용품)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안전인증품목(36개)
안전확인 ↓ 공급자확인	안전확인 품목 중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빈도 및 위해 우려가 낮은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조정('27) · (전기용품) 재봉기, 포장기기 등 안전확인품목(64개), ·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신규 품목 지정) 안전관리대상 신규 품목 지정시에도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합리적인 규제수준 지정 절차 확립

* 신규품목 지정시,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 + 해외 리콜 동향 및 업계 수용성 추가 검토

□ 어린이제품 시험검사방법 및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시험검사방법) 어린이 제품 일부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간 상이한 시험검사항목을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신속 시험검사 도입 검토^{신규}

* 자전거 안전기준의 납 함유량 기준(총 납 300 mg/kg 이하) vs. 공통안전기준의 납 함유량 기준(총 납 100mg/kg 이하) → 공통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 (부적합처리) 미국·EU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어린이제품 품목 · 시험기준별 위해도를 고려한 결함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신규}

* (최중결함) 제품수거 등의 명령, (중결함) 제품수거 등의 권고, (경결함) 개선명령

□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 정비체계 확립

- (정비대상) 안전관리대상 소품목에 대해 3년 주기로 안전기준 적정성 평가체계를 신규 도입하여 매년 정비대상 안전기준 도출^{신규}

- 품목별 위해사고 통계, 인증수요, 기술변화, 해외 규격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정비대상 확인 절차를 준용

- (정비절차) 안전기준 정비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안전기준 제 · 개정시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절차 도입^{신규}

-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필수 시험항목(물리·화학·전기적 안전요건)은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험항목은 원칙적으로 완화 추진

□ 원부자재, 부품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생활·어린이제품) 섬유, 가구 등 원부자재가 포함된 완제품 시험시 동일 원부자재에 대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검토^{신규}

* 섬유(원단), 가구(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은 원부자재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필요시 완제품의 추가 안전요건만 시험 → 섬유, 가구 중심으로 시범적용 후 단계별 범위 확대

-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 주요 부품에 대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IECEE 부품인증(CCP)* 제도 도입 방안 검토^{신규}

*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는 회원국(53개)간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상호 수용하는 CB인증제도를 운영중이며, '24년부터 부품단위 인증제도(CCP, Component Certification Program)을 신설

2-2 생활밀착제품 안전기준 적기 정비

- ◆ AI·IoT·무선충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다양화·다변화로 새로운 위해요소 등장 및 안전관리 적기 지원 필요
- ◆ 고성능 배터리(고용량·고밀도), 배터리 내장제품의 일상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 출현으로 현행 안전기준으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사례 발생

□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 (융복합 무선충전) 무선충전 기술이 가전제품,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무선충전 융복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신규}
- (가전제품) 무선충전 기능 포함 융복합 가전제품의 안전성 검증 방안 개발(‘26) 및 안전기준·안전관리대상 도입(‘27)
- * (新 위해요소) 무선충전패드 위 이물질(동전, 열쇠 등)로 인한 유도과열 및 화재위험 등



- (전기차 충전기) 무선 전기차 충전기, 기계식 주차장용 충전기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적기 지원을 위한 예비안전기준* 개발(‘26) 및 안전기준 정비(‘27)
- *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경북)” 등 실증특례·자유특구 사업 11건 지원



○ (신기술 스마트가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효율 친환경 기술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지능형 IoT 기능이 적용된 가전제품 안전관리 강화^{신규}

- (친환경 가전) 인버터,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 가전제품의 새로운 위해요소(화재, 감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 ('26) 신기술 위해요소 분석 및 실태조사 → ('27) 안전기준 마련 → ('28) 안전관리 도입 추진

구분	전자레인지(인버터방식)	건조기(히트펌프방식)
가전제품 (예시)		
차별점	연속적 출력 조절로 온도편차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저온제습 방식으로 옷감 손상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요건	인버터식 전자레인지의 출력 제어(전압, 전류) 등 안전요건 강화	친환경 인화성 냉매의 안전성 검증, 표시 사항(주의문구 등) 개선 등 안전요건 강화

- (스마트 가전) IoT 연계 스마트 가전 출시 확대에 따라 원격제어 기능 이상으로 인한 오동작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원격 제어 실증사업'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검증 및 예비안전기준 개발('26~), 기업수요를 고려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27)

스마트인덕션(예시)	주요 기능	안전관리대상
	· 딥러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레시피 추천 · 온도/수분 감지를 통한 최적의 조리 환경 구현 등	x
	· 원격제어 시 이상운전(온도센서 오류, 기기 제어 불가 등) 감지 후 전원 차단 등	○ 원격제어 금지(기준) ↓ 안전성 검증에 따른 원격제어 허용

□ 배터리 제품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사용환경 대응)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고용량 등)와 내장형 제품 확대에 따라, 실제 사용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 강화^(신규)

- (관리범위 확대) '휴대용/이동가능한 제품' 중심에서 18kg 이하 모든 제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추가 안전관리대상 제품 (예시) : 선풍기, 로봇청소기, RC카 등

- (보조배터리 안전 강화) 기존 IT기기(노트북, 휴대폰 등)에 적용하는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화재확산 방지(난연구조) 등 안전성 확보

* KC 62368-1(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안전 요구사항)

- (BMS 평가 고도화) 산업용 배터리(ESS 등)에서 적용되는 BMS* 평가에 최신 국제표준 반영, 부품단위 국제인증 도입 등 안전관리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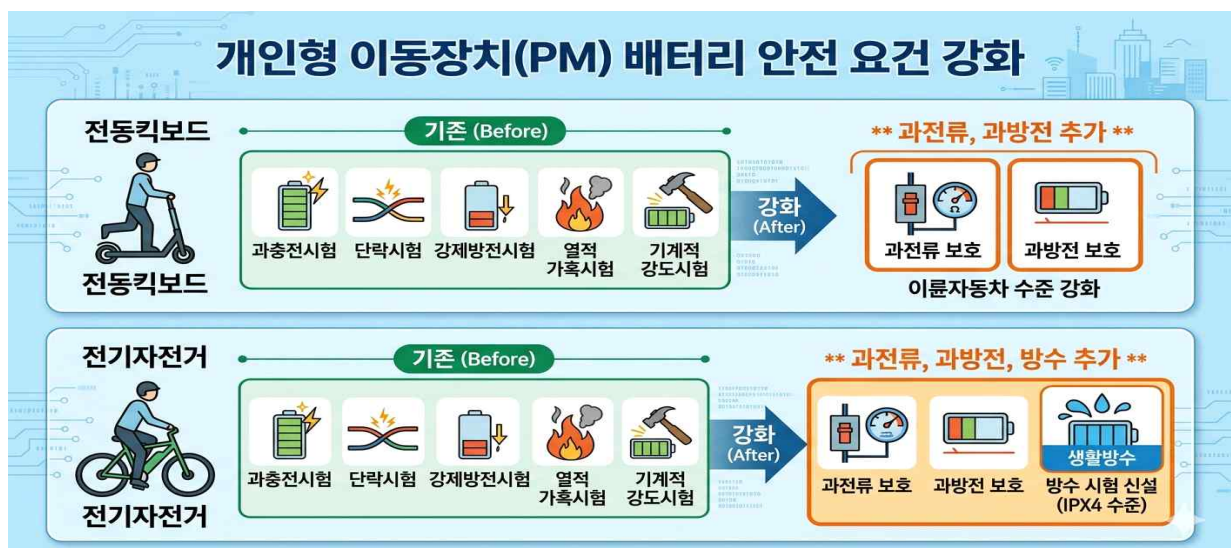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상태를 감시하고 안전하게 제어하는 전자회로/시스템

○ (PM화재 예방)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건 강화

- (전동킥보드) 현행 배터리 안전기준에 과전류·과방전 안전요건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 배터리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과전류·과방전 안전요건을 추가하고, 전기부품에 대한 방수 시험항목*을 신설하여 화재사고 예방

*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적 장치의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생활방수(IPX4) 수준의 안전성 요구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활성화

- (검사 인프라 확충) 지자체, 지역별 TP 등과 협력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확대하고, 배터리 공급망과 연계한 검사체계 구축
 - (검사기관 확대) 지역별 TP중심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검사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 추진
 - * ('25) 제주·울산·경북 TP → ('26) 부산·경남 TP 확대 → ('27~) 타 지역 확대
 - (연계 활성화) 환경공단 등 배터리 거점수거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배터리 수거 - 검사 - 공급'의 One-stop 체계 구축 협의('27~)
 - * '거점수거센터 배터리진단기술과 'KC 10031 안전성검사결과 상호 검증을 통해 검사결과 연계 검토
- (검사부담 완화) 전수검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W기반 검사기법 개발·활용 및 검사비용 지원
 - 초기 전기차 모델(3종)에 한해 적용중인 S/W 검사*를 다양한 신형모델로 확대하기 위한 검사기법 개발 및 검사기관 확대**
 - * 배터리에 저장된 운행이력(잔존용량, 전압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검사대비 시간 및 비용 절감
비용절감(팩 기준): (물리적 검사)약 200만원, 50시간 Vs. (SW 검사)약 50만원, 2시간
 - ** S/W 검사 전기차종(3종 → 10종) 및 검사기관(1개소 → 6개소) 확대를 위한 R&D('26~)
 - 지역별 TP,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중소·영세기업 대상 검사비용의 지원방안 검토
- (신제품 출시지원) 지자체별로 계획중인 재사용전지 실증사업(태양광 가로등 등)을 지원하고, 부처별 관리품목에 재사용전지 활용방안 협력
 - * 「농업기계 검정기준(농림부) 개정('25.7.)」에서 KC인증 재사용전지 사용기준 신설



2-③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고령자 인구 증가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품목·기준 적기 정비 필요
- ◆ 학교, 가정 내 어린이 접근·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 일부 초등학교의 칠판, 게시판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품목·기준 정비

- (어린이) 어린이제품 실태조사를 통해 위해우려 제품을 발굴하고, 국제기준 적용,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 개정^{신규}
 - * 사용연령제한(3세 이상), 주의경고표시(예: 어린이 피부에 부착하는 제품의 경우 - 피부발진 등 보호자의 관찰 필요) 추가
- (고령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고령친화산업진흥법) 기반으로 고령자 관련 용품의 안전성·사용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검토
 - * 심사절차 개선(사용성평가-개선 연계), 복지용구 안전·사후관리 연계 가능사항 검토(‘26~)

□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교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내 어린이가 접근·사용가능한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신규}
 - 칠판·게시판 등 교구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 추진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내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25.12.) 및 시행(‘26.12.)
- (일반생활용품) 위해 시나리오 및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성인과 공동사용하거나 어린이 위생에 밀접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신규}
 - 바닥재, 가구 등 어린이 사용 가능성이 높은 생활용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신설 등 안전기준 개정
 - 젖병세척기, 유아전용세탁기 등 어린이 위생에 밀접 관여하는 제품에 대해 공통안전기준 마련 등 추진

□ 신규 어린이제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관리범위 확대)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시 증가에 따라, 위해 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품목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신규]

* 예) 지면 매립형 바운싱 기구, 롤러 미끄럼틀 등 신규 놀이기구

- (안전요건 강화) 신기술 적용 등으로 기존 안전기준으로 안전확보가 어려운 경우 추가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안전기준 반영^[신규]

* 자외선(UV)을 이용한 완구, 가정용 대형 풀장 등 물놀이 관련 완구

< 신기술·신종 어린이제품 사례 >



UV레진공예 완구
(완구)

지면 매립형 바운싱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허리돌리기 기구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 안전기준 개선을 통한 시험검사방법의 효율화·신속화

-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 내 일부 시험검사항목에서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신속 정비(공통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신규]

* 어린이제품(34개 품목)은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의 불일치 사례 >

구 분	납 함유량 기준 (적용범위)	시험검사방법
품목별 안전기준 (자전거)	총 납 300 mg/kg 이하	섬유원단은 실시하고, 납 함유량 상한은 총 납 300mg/kg로 적용
공통안전기준	총 납 100 mg/kg 이하 (섬유원단 미적용)	섬유원단은 미실시

- 주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련,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시험검사방법 개발 및 도입 검토^[신규]

2-4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지원

- ◆ EU 등 주요국은 제품 설계시 사전 리스크평가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 EU는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시행으로 제품 출시전 기업의 리스크평가 의무화('24.12월~)
- ◆ 생활·어린이제품의 경우,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설계·품질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실정

□ 수출기업의 제품 위해도 사전 평가체계 구축 지원

- (프로그램 고도화) 제품 출시 전 수출기업의 제품 위해도 자체 진단을 돕는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품목군* 확대
 - * 해외 리콜제품 상위 품목(직류전원장치 등) 중심으로 순차 확대('26~)
- (보급 확대) 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설명회·컨설팅 등 확대 실시
 - * 해외인증지원단, KOTRA 등이 개최하는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참여 등

□ 기업대상 규제준수를 위한 인증지원 서비스 제공

- (표시사항 지원)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표시사항(사용연령 등), 주의사항 자동생성을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신규}
 - *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25년~), 공급자적합성확인('26년~)
- (안전기준 가이드) 안전기준 개정 시 기업 수용성 등 제고를 위해, 적용범위, 시험항목, 표시사항 등 개정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신규}
 - * 음식물 처리기, 폐열회수환기장치 등 소비자 수요가 높거나 위해 우려 제품 대상 우선 제공

□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지원 및 우수기업 발굴

- (인증비용 지원) 어린이제품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C 인증 취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확대
 - * (지원금액) ('25년) 지원기업수 382개 → ('27년) 지원기업수 400개
- (우수기업 발굴) 어린이제품 우수 선도기업 발굴 확대를 위해, 관련 운용요령 개정 및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확대 추진
 - * 시험검사주기 연장, 인증비용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우수 기업 발굴 확대

3.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시장감시 강화

3-① 통계기반 중점관리품목 집중 관리

- ◆ 매년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리콜제품은 여전히 5%수준으로 발생
 - * 리콜조치율: ('22) 5.1% → ('23) 5.5% → ('24) 5.5% → ('25) 5.1%
- ◆ 시장감시를 위한 한정된 예산과 출시제품 다양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리콜이행 점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 안전성 조사 추진

- (중점관리품목 확대) 사고다발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하고, 지정 품목 수 확대
 - * 중점관리품목 수 : ('25) 58개 → ('26) 61개 → ('27) 65개 → ('28) 70개
- (안전성조사 절차)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조사 유관기관 (국표원-제품안전관리원-시험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등 조사절차 개선
 - * ('26)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27~) 조사절차 개선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

- (검사 고도화) 국표원-관세청 협업 중인 통관단계 제품 안전성 검사 적용을 위한 유해물질 신속 검출 비파괴 검사 기법 개발^(신규)
 - * AI 활용 비파괴(XRF) 유해물질(금속) 식별 및 안전관리 통합 기술개발('26)
- (현장 적용) 유통 시기별(여름/겨울), 테마별(신학기, 가정의 달) 주요 품목 대상 제품을 상시·집중(4회) 검사시 시범 적용 및 단계별 확대 추진^(신규)
 - * ('27) 인천공항세관 시범 운영 → ('28) 주요 세관 확대 추진

□ 리콜이행 강화

- (리콜이행체계 개선) 리콜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유통 특성별 리콜이행 실태조사 후 리콜이행체계 개선
 - * ('26) 리콜이행점검표 개선 및 실태조사 → ('27) 리콜이행체계 개선
- (리콜정보 제공) 리콜정보 제공 지자체·교육청을 전국으로 확대
 - * 지자체 : ('25) 경북, 전북 등 2개 지자체 → ('28) 서울·경기 등 전국 확대
 - ** 교육청 : ('25) 부산·경기 등 5개 지자체 → ('28) 서울 등 전국 확대

3-2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불법 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제품 위반사례는 여전히 지속 발생

* '25년 불법의심제품 139,202건 모니터링 → 17,366건 적발·판매차단

◆ 불법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 감시를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확대 등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불법제품 단속 강화

○ (지자체 협력)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합동단속 지자체를 확대하는 등 단속 강화

* ('25) 서울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등 25개 지자체 → ('28) 40개 이상 확대 추진

○ (경찰청 협력) 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확대하여 전지,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 중심으로 KC미인증 등 불법제품 단속 강화

* ('25) 부산 강서, 전남 순천 등 4개 경찰서 → ('28) 7개 이상 확대 추진

○ (교육청 협력) 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인근 유·무인 매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위해제품에 대한 계도 및 안전교육 실시

* ('25) 전남, 경북, 강원 등 3개 교육청 → ('28) 5개 이상 확대 추진

□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연중 감시) 소비자단체(안전감시원 150여명)와 협력하여 대형 플랫폼·매장 중심에서 전문몰 등 온·오프라인 新유통 채널까지 확대

*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 교구 전문몰 등 (오프라인) 박람회, 팝업스토어로 확대

○ (전문성 제고) 안전모니터링 감시원, 지자체 공무원의 제품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무워크숍 확대**

* 미인증·허위표시 등 불법 제품 식별, 불법·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25)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 대상 교육 7회 → ('28) 10회 이상 확대 추진

3-3 AI기반 제품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 전담 인력을 통해 언론·커뮤니티 등 상시 제품사고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나 단순 반복 업무 가중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 등 업무 비효율 발생

* 제품 사고정보 모니터링 건수(건) : ('23.4.~12.) 428 → ('24) 4,180 → ('25) 1,402

◆ 제품사고 정보수집→분석→사고조사→후속조치 등 신속한 제품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품사고 처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제품 사고조사 건수(건): ('21) 60 → ('22) 73 → ('23) 94 → ('24) 71 → ('25) 65

□ AI기반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신규]

* ('25) 정보 수집·분석 실증 완료 → ('26) 업무 활용 → ('27) 정보 연계·활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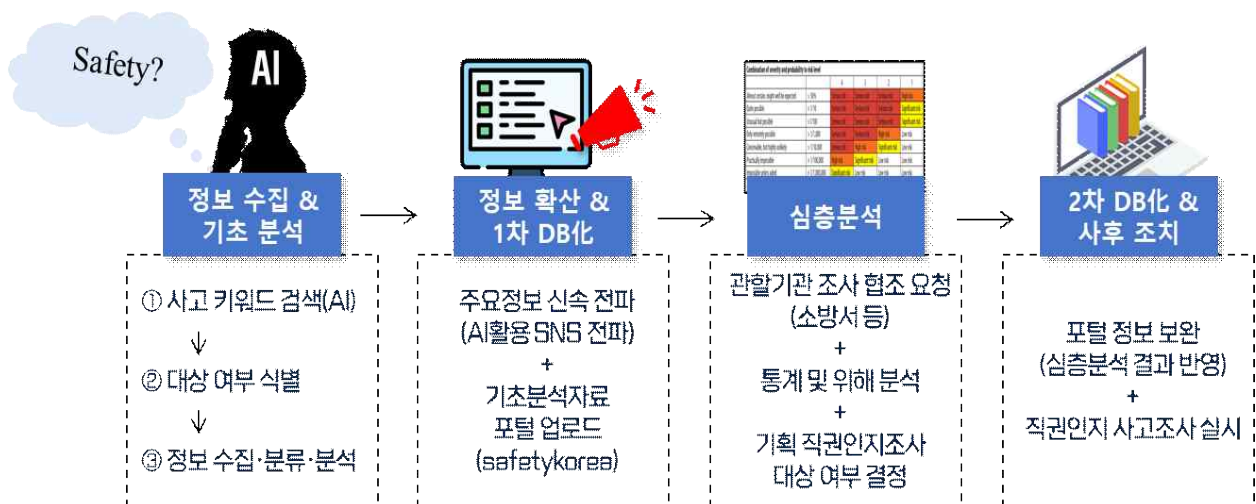
① (정보 수집·분석) 언론·커뮤니티 등의 제품사고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고, 사고조사센터에서 신속 대응토록 SNS로 전파

② (심층분석) 심층분석 대상을 선별하여 통계(유통 현황 등) 분석을 통한 사고조사 대상 검토, 제품 유통 차단 등 안전조치에 집중

③ (정보활용) 수집·분석된 정보는 AI 검색·분석 및 외부 연계가 용이한 DB로 공개하여 제품안전관리 업무* 활용성 제고

* 리스크평가, 안전기준 제·개정, 제품 위해동향 보고서, 수입·통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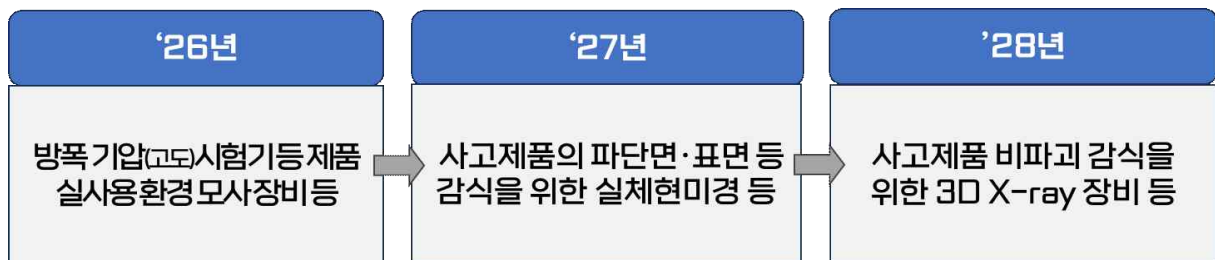
< AI기반 제품사고 정보수집·분석·활용 절차 >



□ 제품 사고조사 역량체계 고도화

- (조사 역량 강화) 제품 실사용 환경·패턴 모사 설비와 분석 장비를 개발·활용하여 사고 다발 제품의 사고 원인 분석 역량 제고^(신규)
- 진동·충격·낙하 등 제품 실사용시 노출될 수 있는 조건 모사 설비와 현미경, 3D X-Ray 등 감식·분석 장비 연차별 개발·구축('26~'30, R&D)

< 연차별 설비·장비 구축 계획(안) >



- 구축한 설비·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다발 제품의 사고 원인·기전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조사의 신속도·정확도* 제고('27~)

* 구축 장비로 사고제품의 표면·비파괴 감식한 결과를 활용하여 사고조사 계획 수립시 결함조사 가설 설정의 정확도 개선

- (조사 방법·체계 개선) 사고조사 신속 착수를 통한 조사 기간 단축 및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고도화 추진

- 선행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일부 품목에 적용 중인 사고조사 '필수 시험 항목' 지정을 타 품목에 확대 적용*하여 조사 계획 수립 기간 단축('26~'28)

* 연차별 품목 확대(안) : ('26) 총 10종 → ('27) 총 15종 → ('28) 총 20종

** '25년부터 충전지 등 5개 품목별로 필수 시험항목을 지정하여 사고조사시 해당 항목 시험·분석을 우선 착수하고, 필요시 추가 시험항목을 적용하여 조사 기간 단축

- 국제표준의 기법을 도입하여 현행 제품 결함조사 위주에서 제품 사용 환경, 인적 요인 등으로 사고 원인 조사·분석 범위 확대(~'28)

* ('26) 국제표준(ISO5665, 소비자 사고 조사) 기반 사고 정보 분석 방법 마련 → ('27) 정보 분석 방법 고도화 → ('28) 사고조사 설계 모형 구축·적용

3-4 AI 활용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 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정보수집·분석에 한계

* 해외 리콜제품(개) / 국내 후속조치(건수)

(‘22년) 2,943 / 54 → (‘23년) 3,160 / 122 → (‘24년) 4,182 / 187 → (‘25년) 4,175 / 186

◆ 불법 리콜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의 지속 확산 필요

* 시스템 운영매장(개) : (‘22년) 248,478 → (‘23년) 259,523 → (‘24년) 265,513 → (‘25년) 296,669

□ AI기반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차단

○ (정보 수집·분석) AI기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43개국 13개 제품 리콜 사이트에 공표된 리콜 제품 정보를 즉시 수집·분석·DB화^{*[신규]}

* 리콜정보(리콜실시국, 리콜 원인, 리콜 구분), 제품정보(품목명, 모델명, 사진 등), 위해요소 (유해물질, 검출량, 위해부위 등)



○ (국내 유통 감시·차단) 온라인 유통 제품 정보를 스크래퍼^{*}로 추출하고 AI로 리콜 여부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체계 실증 추진^{(26)[신규]}

* 스크래퍼(scraper) : 웹사이트의 HTML 구조나 API 응답 등에서 텍스트, 이미지, 표 등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와 가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스크립트

○ (민간 자율 제품안전관리 기반구축) 기업이 해외 리콜제품 유통을 AI로 자체 관리하는 모범사례^{*}를 개발·확산하기 위한 민간포럼^{**} 운영 지원^[신규]

* API 등으로 수집된 쇼핑몰 제품정보와 수집된 위해정보 간 AI활용 매칭 후 즉시 차단 등

** KC인증, 리콜 등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제품 차단 등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 확산을 도모하고자 '21년 발족(간사: 제품안전협회, 30여개 기업 참여)

□ 유통업체대상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확산

○ (중소형 매장 확산) 유통매장서 위해상품 결제시 자동 판매차단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매장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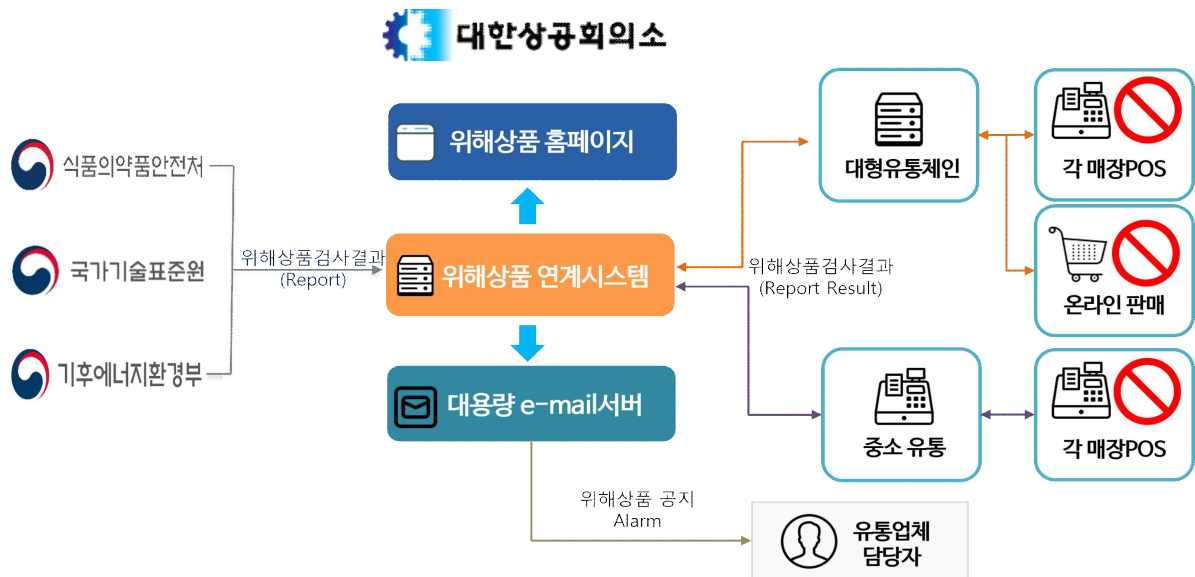
- 기존 유통매장 개별 설치 방식에서 확장성이 유연하고 시스템 운영 부담을 낮춘 클라우드 기반 중앙관리형 솔루션으로 전환

* 시스템 운영매장 확산 : ('25년) 296,669개 → ('28년) 317,000개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매장에 대한 일부 설치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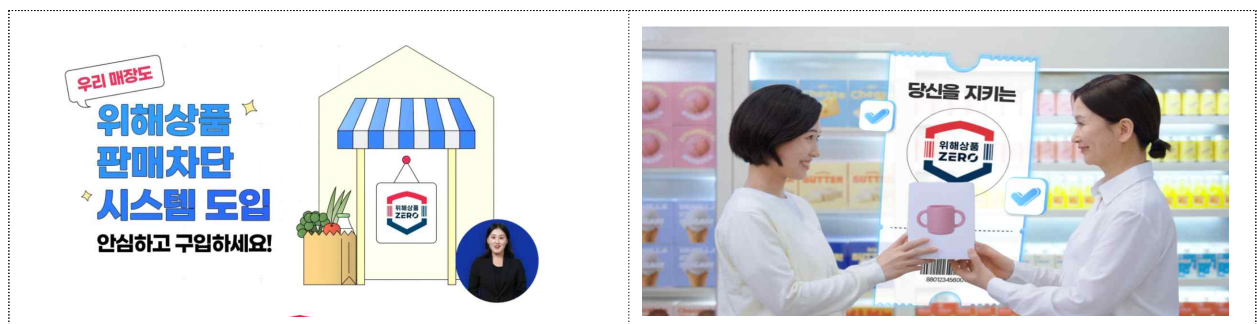
* '26년 1,500여개 매장 대상 지원예정(138백만원)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 >



○ (시스템 인지도 향상) 유통업계의 자발적 시스템 도입 촉진과 대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인기 유튜버, 소비자 등과 협업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등



4.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 조성

4-1 민간 자율적 제품안전관리체계 확산

- ◆ 제조업자·판매업자·소비자·규제기관 등이 일관된 표준 제품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시장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기반 조성 필요
- ◆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온라인 상품 등록시 인증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음

□ 범부처, 유통업체대상 제품 표준 분류체계 도입·활용 확산

- (제품분류 고도화) 글로벌 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 인증대상 식별 및 제품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제품분류체계(GPCK)* 고도화**
 - * 글로벌 GPC코드 제·개정에 따른 표준 제품분류체계 현행화, 보다 정확한 인증대상 여부 식별을 위한 품목별 세부 지표 정비(소관품목 법령, 안전기준 등 반영)
- (범부처 도입 확대) 기 구축된 산업부 소관제품(전기, 생활, 어린이제품)외에 기후부, 식약처 등 타부처로 **표준 제품분류체계 도입 활용 확산**
 - * 기후부(생활화학제품), 식약처(의약품 등) 등 소비자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확대
- (실증사업 추진)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등록시 표준 제품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미인증 제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증사업 추진^(신과)
 - * (1단계) 온라인 상품등록시 인증대상 여부 지원을 위한 API 개발 보급 →
 - (2단계) 학습형 AI활용, 상품정보(사진, 제품설명 등)만으로 인증대상 자동 식별 및 정확도 향상

< 표준 제품분류체계 활용 >



□ 유통플랫폼 대상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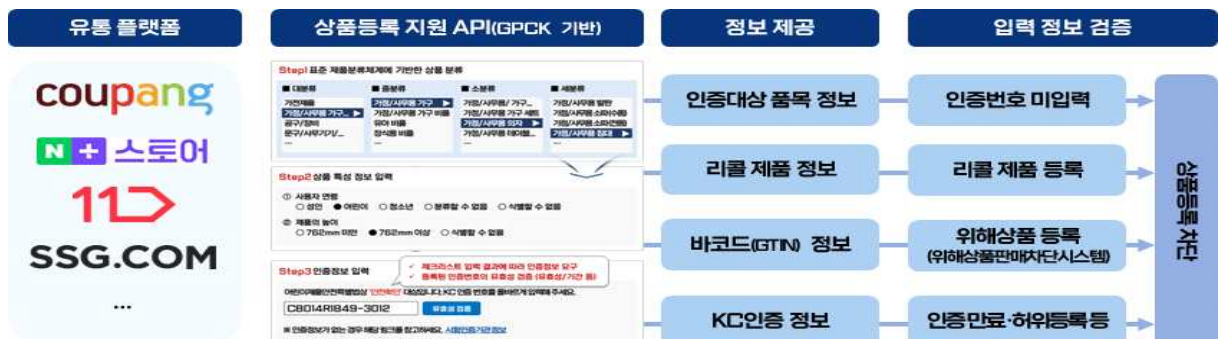
- (온라인쇼핑몰협의체 확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채널인 온라인 쇼핑몰협의체 참여기업 확대
 -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문 쇼핑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제품 정보 상시 공유, 판매 차단 등 협력
- * ('25) 20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 → ('28) 30개 이상 쇼핑몰로 확대

< 온라인쇼핑몰협의체 회의 >	< 제품안전 교육 >
	

- (유통플랫폼 교육) 유통사 대상 실무교육(연 2회)을 정례화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지원
- * (현행) 기업 요청시 교육 → (개선) 정례 개최(연 2회)

< 실무자 교육 >	< 현장 교육 >
	

- (불법제품 유통 차단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준수를 위해, 제품의 인증대상/리콜 여부 등을 지원하는 API개발·보급 전파^{신뢰}
- *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KC 미표시 제품 삭제 ▲상품 등록시 통신판매업체의 KC정보 입력 ▲판매제품의 KC정보 소비자 제공



4-2 수요자중심 정보·교육·홍보 다각화

◆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제품안전 정보제공 및 검색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기존 제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편 필요

* 시스템 일일 사용자 수는 5만여 명으로 지속 증가추세이나 사용자 편의성 미흡한 실정

◆ 소비자 관점의 다양한 제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제품안전 인식 제고 필요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고도화

- (정보기반) 다양한 제품안전 정보를 소비자·기업·유관기관 등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신규)
 - (정책 지원 기능 강화) 수집-생산-관리-활용 등 제품안전 정보 업무 자동화·효율화, 민원·문의사항 대응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
 -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다양한 기업·소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및 서비스 신속 제공
 - (정보 연계·교류 기능 강화) 중앙부처, 지자체, 제품안전관리원, 시험인증기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교류·협업 지원

* ('25) 모형 개발 및 실행계획(ISP) 수립 → ('26) 구축예산 확보 →

('27) 클라우드 환경 포털 구축 → ('28) AI 기반 제품안전 정보관리 및 활용 기능 개발

< 제품안전정보포털 개편(안) 주요 내용 >

구분	AS IS	TO BE(추가 제공·지원)
핵심 서비스	- KC인증 제품정보 제공 - 국내·외 리콜 제품정보 제공	⇒ - 제품안전 동향·통계 제공 - 안전기준 정보 통합 제공(내부·대국민)
민간 활용 지원	- 웹사이트에 정보 게재(키워드 검색 가능) - Open API 제공	- AI 챗봇 제공 - 민간의 AI에이전트 등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 * Open API, RSS, MCP 등

- (KC안전기준 디지털화) 안전기준을 기계 가독형*으로 전환하여, 안전기준 관리 효율화 및 기업 등 민간 활용 활성화** 추진^(신규)

* 기계 가독형(Machine Readable): JSON, XML, HTML, CSV 등 정보시스템·AI가 자동으로 검색·분석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문서 형태

** ('26)안전기준 기계 가독형 전환 SW 개발 → ('27)안전기준 기계 가독형 전환 → ('28)ISO·IEC·KS 등 표준 연계 및 제·개정 이력 관리 등 체계 시범 구축

□ 계층별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홍보 다각화

- (어린이 교육) 어린이제품 선도학교·체험관 운영 등 어린이제품안전 분야 맞춤형 교육·홍보 지속 확대
 -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4개교('25년) → 30개교이상('27년~), 선도학교 미선정 지역 우선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기존 지자체 안전체험관 연계 제품안전 체험시설 운영 확대
- (어린이 그림공모전) 유치원·어린이 관심을 높여 참여 작품을 확대하고, 수상작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여 국민 공감도 제고
 - * ('26) 1,600점 → ('27) 1,700점 → ('28) 1,800점 ☞ 참여 작품수 단계적 확대
- (청소년 교육) 기존 단편적 교육(PPT 등)에서 영상 콘텐츠 교육중심으로 제품안전 업무 진로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 * ('26)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 ('27~) AI·융복합·신제품 등 품목별 주요 이슈 콘텐츠 개발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 (취약계층) 일반소비자 대상 교안과 분리하여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교육 접근성 개선
 - * ('26) 고령자(글자크기 확대한 교재) → ('27) 장애인(점자교재) → ('28) 다문화가정(다국어교재)
- (사업자) 소상공인과 AI·신제품 사업자,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무형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제작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 ('26) 전기·생활·어린이 중·소상공인 → ('27) AI스타트업 → ('28) 글로벌시장 진출 준비 기업

□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 인식 제고

- (홍보다각화) 디지털 미디어 중심 정책홍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숏폼영상, 카드뉴스 등 소비자 소통가능한 온라인 매체 활용 확대
 - * ('26) 숏폼영상(청소년·MZ세대) → ('27) 카드뉴스(국민) → ('28) 다국어 콘텐츠(해외 소비자)
- (정부포상) 신청·접수중심의 유공자 발굴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유공자를 발굴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 유공포상 저변 확대
 - * 정부포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상 기업에 대한 카드뉴스, 숏폼 등 홍보 강화

4-③ 제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제품안전정책 수요 발굴, 계획 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협력체계 확대 필요
- ◆ 글로벌 생산·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각국간 긴밀한 제품안전분야 국제 협력을 위해, 다자·양자간 제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제품안전 정책 및 정보교류 활성화

- (부처협업) 해외직구, AI제품 안전 등 부처 협업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적기 현안 대응
 -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부처협력, AI제품 위해요인별 안전관리, AI활용 위해차단 등
- (글로벌포럼) 연도별 글로벌 제품 안전 이슈*를 포럼 주제로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 해외규제당국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
 - * 예) ('26) AI기반 시장감시 역량 강화 → ('27) AI 융복합 제품 안전성 확보 등
- (소비자단체) 소비자 수요중심의 정책 이슈 발굴 확대 및 상시 소통 협력 채널 구축 등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확대
 - * 소비자단체를 통해 위해제품 모니터링 → 비관리 위해우려 품목 도출 등 소비자 관점의 제품안전정책 수요 발굴 및 정책 수립시 의견수렴 실시

□ 글로벌 제품안전 네트워크 강화

- (다자협력) 국제표준화기구, OECD(소비자제품작업반) 등 기존 국제기구 참여 중심에서 총회 유치, 신규 프로젝트 제안 등 아국 주도로 전환
 - * ISO COPOLCO(소비자정책위) 총회 유치('27), AI·디지털취약계층 제품안전분야 신규 표준 제안 등
- (양자 협력) 글로벌 제품안전 이슈 공유* 및 규제협력 강화를 위해, 美, 中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중심으로 양자협력 확대
 - *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입 대응 및 글로벌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등 주요국 양자협력 정례화
 - **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규제당국과 신규 협력체계 구축

4-4 제품안전 유관기관 전문역량 제고

◆ 융복합·신제품 출시 등 제품시장 다변화에 따른 KC인증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및 기관간 동등성 확보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전기·생활·어린이) 안전인증기관(7개), 안전확인시험기관(25개), 안전성검사기관(12개) 운영중

◆ 기존 시장감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하고,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제품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역량 확보 필요

* 위해성 시험·평가체계 구축, 안전기준 연구,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 KC인증기관 신뢰도 제고

○ (협의회 구성) 주요 품목군별 인증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 간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한 품목별 업무 가이드 및 사례집** 지속 발간

* 인증대상 여부, 안전기준 해석 등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해 협의회 수시(분기별 1회) 운영

** 가전제품('26), IT사무기기('27), 전기저장장치('28) 분야 업무가이드 및 사례집 마련

○ (기관 역량 제고) 인증기관 시험역량 제고 및 기관간 시험결과 동등성 확보를 위해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훈련 과정 운영^{내국}

* 사후관리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기관간 비교숙련도 평가 및 교육 실시

숙련도	동일시료 대상 숙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관간 시험결과 동등성 평가 실시 → 결과분석 및 개선 피드백 ⇒ ('26) KOLAS 공인 숙련도프로그램 개발 협의 → ('27) 가정용 전기기기 → ('28) 정보통신사무기기 및 전기저장장치(재사용전지 포함)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	KC 시험인증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협의회를 통해 인증대상여부, 시험방법 적용 등이 모호한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자 교육(업무가이드 개발과 연계)

○ (지도감독 강화) KC인증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KC인증 지정 시험·인증기관대상 업무점검 강화

- (정기심사)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생산·출고하도록 제조 공정 전반의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관리체계 집중 점검

- (특별점검) 정기점검(年 1회) 외에 언론 및 민원제기 등에 따른 이슈 발생시 해당 품목 및 관련 제도 중심으로 특별 업무점검 수시 실시

□ 제품안전관리원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역량 강화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6~'28) 추진

☞ 기존 KC인증 사후관리 고도화 + KS·법정계량 통합 시장감시 업무 대응

- (KC업무 강화) KC인증 사후관리 고도화 및 신규 업무 추진
 - (기존) 불법·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리콜 이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모니터링·안전성 조사 등 기존 사후관리 기능을 확대·정비
 - (신규) 제품사고 대응 및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제품사고센터 지정 및 안전기준 조사연구 신설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추진

분야	인력 증원 내용
불법제품 현장조사	불법제품 현장조사 확대, 기획조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안전성 조사	시료구매 사전조사 강화 및 해외직구 품목 대응
리콜 이행 점검	자발적리콜, 리콜제품 재유통차단 및 콜센터 전담인력
제품사고조사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에 따른 운영 인력 확대
안전기준 연구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경영지원	사후관리 업무 지원 및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 (추가 업무 대응) KS, 법정계량 사후관리 신규 업무 대응
 - (특사경) KC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 인력 확충
 - (시판품조사) KS인증·법정계량분야 시판품조사 「시료선정 → 시중구매/공장채취 → 검사 → 결과 분석 → 피드백」 등 소주기 관리 담당
 - (신고센터) 국내 기업의 KS인증, 법정계량제도 상담 및 불량 KS인증·불법계량기 신고 접수 등 기업/소비자 대상 종합 지원
 - (교육·홍보) 사업자·기업의 KS·법정계량제도 실태조사, 기업 및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및 소비자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VII

향후 추진일정

전략 1 사고예방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6	'27	'28
① 해외직구 위해우려제품 조기 유통 차단	① 해외직구 위해제품 안전성조사 확대	산업부, 공정위, 기후부 식약처 등			
	② 해외직구 안전관리 제도정비 및 부처협업				
② AI·신제품 위해요인 선제적 발굴·관리	① AI적용제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			
	② 융복합·신제품 신규 R&D사업 연계 추진				
③ 비관리 위해제품 사각지대 해소	① 소비자수요중심의 비관리 위해품목 발굴 확대	산업부, 공정위, 기후부 식약처 등			
	② 비관리 위해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타당성 검토				
	③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절차 확립				
④ 사고예방중심의 리스크평가 고도화	①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평가체계 고도화	산업부			

전략 2 위해도 중심의 규제정비 합리화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6	'27	'28
① 안전관리품목·기준 합리적 개선	① 규제수준 타당성 평가를 통한 품목 조정	산업부			
	② 어린이제품 시험방법 및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③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정비체계 확립				
	④ 원부자재, 부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생활밀착제품 안전기준 적기 정비	① 융복합·신기술 제품 안전기준 정비	산업부			
	② 배터리 제품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③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 보호 강화	①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품목·기준 정비	산업부, 복지부			
	②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안전관리 강화				
	③ 신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④ 시험검사방법의 효율화·신속화				
④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지원	① 수출기업의 제품 위해도 사전 평가체계 구축 지원	산업부			
	② 기업대상 규제준수를 위한 인증지원 서비스 제공				
	③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지원 및 우수기업 발굴				

전략 3 데이터·AI기반 촘촘한 시장감시 강화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6	'27	'28
① 통계기반 중점관리품목 집중 관리	① 위해우려품목에 대한 집중 안전성 조사 추진	산업부			
	②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	관세청, 산업부			
	③ 리콜이행 강화	산업부			
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 단속 강화	산업부, 지자체, 경찰청			
	②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성 제고				
③ AI기반 제품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① AI기반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	산업부			
	② 제품사고조사 역량·체계 고도화				
④ AI 활용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① AI기반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차단	산업부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확산				

전략 4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 조성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6	'27	'28
① 민간 자율적 제품안전관리 체계 확산	① 제품 표준 분류체계 도입·활용 확산	산업부, 기후부, 식약처 등			
	③ 온라인 유통플랫폼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산업부			
② 수요자중심 정보·교육·홍보 다각화	① 제품안전정보포털 고도화	산업부			
	② 계층별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홍보 다각화	산업부			
	③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산업부			
	④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제품안전 인식 제고	산업부			
③ 제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① 제품안전 정책 및 정보교류 활성화	산업부, 공정위 등			
	② 글로벌 제품안전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			
④ 제품안전 유관기관 전문역량 제고	① KC인증기관 신뢰도 제고	산업부			
	② 제품안전관리원 업무역량 강화				